

국내 소식



① 축산물 항생제 안전관리 강화, GMO쌀과 분유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중 소, 돼지 등 가축용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 허용 종류가 줄어들고 항생제군별로 일정기간씩 첨가를 금지하는 순환 휴약제가 도입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국내에 반입되는 모든 수입쌀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여부를 가리는 국제검정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되며 2008년 이물기준 설정 등 조제분유의 안전성 제고 대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쇠고기에 이어 음식점에서 파는 쌀밥의 원산지 표시제가 2008년께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10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항생제 안전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에 과다 공급되는 항생제는 내성균을 확산시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인체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특히 국내 항생제 사용량(2003년 기준)은 축산물 1t당 0.1kg으로 미국의 5배, 일본의 3배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올 정도로 과잉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배합사료내 첨가를 허용하는 항생제 25종 중 내성률이 높은 품목을 골라 우선 줄이고 항생제 성격별로 약 3년씩 돌아가면서 배합사료내 첨가를 금지하는 순환 휴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항생제 잔류기준 검사비율도 현행 10.2%에서 2010년 82.3%로 높이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현행 100만원인 과태료를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략 3년이면 항생제별 내성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강화책은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 농가가 현재처럼 항생제를 자율 투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림부는 수입쌀의 유전자 변형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 현행 수출국 확인서 징구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는 중국산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국제검정기관(OMIC)의 검사를 모든 수입쌀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사카자키균과 이물질이 잇따라 검출된 조제분유의 경우는 이물 기준과 검사 체계를 2008년까지 구축하고 사카자키균 검사를 확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 이 제도가 무리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입 원칙에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동의하고 있지만 행정력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은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당 밥은 내년 시범 실시

되는 쇠고기에 이어 두번째로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식당 음식이 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업무보고를 통해 농산물 무선인식(RFID) 표준안을 연내 제정, 내년부터 인삼 등에 적용하고 농민들이 천연식물추출액 등을 믿고 구입할 수 있게 친환경 농자재 목록을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수현기자(ewan@yna.co.kr)

2006년 10월 13일

모습공개된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 사향노루



정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사향노루 1마리가 인공증식·복원연구를 위해 특별 방사장에서 적응해 가고 있는 모습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됐다. 10월 4일 환경부에 따르면 1987년 이후 남한에서 목격되지 않았던 사향노루는 20년만인 지난해 9월 강원 양구에서 수컷 1마리가 포획됐다.

이 사향노루의 나이는 포획 당시 15개월로 추정됐으며 서식지의 보전기관으로 최근 지정된 사단법인 한국 산양·사향노루 종보존회(회장 정창수) 방사장에서 격리, 보호받고 있다.

정부는 사향노루 암컷 1마리를 추가로 포획, 인공 증식작업을 벌인뒤 이들을 원래 서식지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이다.

2006년 10월 4일

야생동물 첨단장비 치료 받는다

부상한 야생동물이 X-레이와 초음파진단기, 호흡마취기, 위내시경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회복실에서 보호받게 됐다.

환경부와 강원도, 강원대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야생동물 전문 구조·치료 종합병원인 야생동물 구조센터(센터장 김종택 교수)를 강원대(춘천)에 개소,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월 1일 밝혔다.

김종택 교수를 비롯한 수의대 교수와 대학원생 등 전문 의료진 40여명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2천여평 규모의 병동(방사훈련장 등 포함)에서 소색새와 두견이,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해오라기, 너구리, 고슴도치 등 각종 포유류와 조류 50여마리가 치료를 받고 있다.

야생동물 구조나 치료는 그동안 일부 민간단체가 봉사 차원에서 맡았으나 영세하고 장비가 부족해 전문적 치료가 사실상 어려웠으며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구조 실적은 1천816마리 중 909마리(생존율 49.9%)로 그다지 높지 못했다.

강원 지역에 신설되는 도로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의 서식지가 차단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도로를 건

니다 차량에 부딪혀 죽거나 부상을 당한 동물들이 늘어났다.

솔부엉이는 비닐하우스에 걸리거나 건물에 부딪혀 날개를 다쳤고 해오라기는 전선에 걸렸으며 야행성인 수리부엉이는 비행을 하다 눈부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방향을 잃고 골절을 당했다.

고슴도치는 어미가 죽은 채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중 탈진한 상태에서 인근에 사는 중학생이 신고, 병원으로 들어왔고 고라니는 밀렵꾼이 놓은 올가미에 걸려 다리가 부러졌다.

다친 정도에 따라 3~5주내 회복실에 들어가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심각한 근육 손상이나 골절상 등은 최장 1년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부상에서 회복되면 야생동물들은 보호사(방사 훈련장)로 옮겨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야생 적응 훈련에 들어가며 비행금지→비행제한→비행자유 단계를 거쳐 최종 방사 여부가 결정된다.

구조센터 수의사 여광영(45)씨는 “부상한 동물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을 훈련을 거쳐 대부분 자연으로 방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구조·치료 기능과 더불어 조류인플루엔자(AI),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광견병 등 질병조사 연구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용기자(ksy@yna.co.kr)

2006년 10월 1일

도토리 주워가면 과태료 20만원




“야생동물의 먹이 도토리를 주워 가지 마세요”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도토리를 주워가는 행위가 도토리를 겨울 식량으로 삼는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생태보전시민모임 등은 9월 24일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 입구에서 겨울 양식이 모자라요를 표어로 도토리 줍기 금지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6일부터 도봉산에서 ‘도토리 채취금지’ 캠페인과 다양한 자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탐방객들에게 살아 숨쉬는 자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캠페인에선 다람쥐 퍼포먼스, 도토리 포토존 촬영, 도토리 스탬프 찍기 등 이벤트가 열린다.

국립공원내 도토리 채취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29조에 근거,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된다. 김성용 기자(ksy@yna.co.kr)   

2006년 9월 24일

전 기사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